

민주 “이상민 해임안 수용 여부, 尹 직접 밝히라”

“동문 후배, 최측근만 챙긴단 아집”
“헌법 거슬러...尹이 직접 의견내야”
“與 국조위원 사퇴, 힘빼기·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규탄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그 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 장관만 챙기겠다 아집”이라며 “아직도 검찰 출신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은 법적 책임 우선 규명 논리”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 입장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정신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해임건의안은 발의와 의결 요건이 매우 엄격

히 규정돼 있다”, “특별히 무게를 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수용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자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참모들이 나서 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들, 또 부대변인이 거부한다 안 된다는 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니 대통령이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 또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실무자 뒤에 숨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많은 국민이 참담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정조사는 빠른일 금요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당 국정특위



위원들이 사퇴를 언급하는 등 경계당파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힘빼기·무력화 시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해임건의안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해임건의안 처리 관련 촉구하는 게 우선이고 현 단계에선 언급하긴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 강득구 원내 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응수하고 예산안을 불모로 마지막 책임마저 견어차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 능멸하며 어떻게 해서든 꼬리 자르기로 위

기를 모면하려 한다”며 “이런 모습은 정권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동주 원내 부대표는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양심을 버렸다”며 “정부는 마약을 찾겠다며 참사 희생자를 희롱하고 국민의힘은 유가족이 협의회를 구성하자마자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본능에 충실해 자신의 측근만 챙기는 데 혈안이 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원한을 풀고 유족이 조금이라도 평온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광주·전남, ‘김광동 진실 화해 위원장 퇴진’ 요구 확산

광주·전남 지역에서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의 수장에 5·18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한 데 따른 반발로, 5월 단체는 물론 지역 정가로도 반발 여론이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광동 위원장은 편협한 역사관과 진실 왜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화해’와 ‘화합’을 원한다면 논란과 분란을 유발하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는 진실을 바탕으로 ‘어두운 과거사’를 규명, 화해에 이르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라며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허위라 주장하고 ‘북한 개입설’을 다른 논문을 발표했던 인물을 임명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을 임명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수준을 여실히 준다”면서 “진실에 눈 감고 망언을 일삼는 자를 임명한 건 송고한 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모욕한 것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 통합과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임명 철회와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런 인사는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강조한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자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與 “尹정부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나라 안팎 위기 직면...노동개혁으로 극복”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다. 우리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나라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날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회의에서 내놓은 권고문을 인용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고안을 밑그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며 “노동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역점을 둔 개혁과제이지만 응두사미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노동개혁 결실을 내시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도 “노동개혁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어느 역대 정권보다 노동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설득은 물론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달린 노동개혁에 민주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언급하며 “이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주, 월, 분기, 연(年) 등 52시간제 단위 확대로 근로시간제 유연성·탄력성 제고 ▲연공형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노동시장 권고안을 ‘주 69시간 근무제 변경’이라고 부르며 공세에 나선 데 대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격했다.

이 부대변인은 “업종에 따라 몰아서 근무하



는 형태가 필요한 현상이 존재한다”며 “데이터 서버나 게임 등 IT 업계와 건축·도목 업계는 특정 기간 업무량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하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연 단위 대비 70%로 줄어 총연장 근로시간은 줄어든다”며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전체 총량치 근무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고,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다. 민주당은 주 69시간 근무제로 왜곡해 입법을 저지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